



##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서의 러시아 국가-문명론

최우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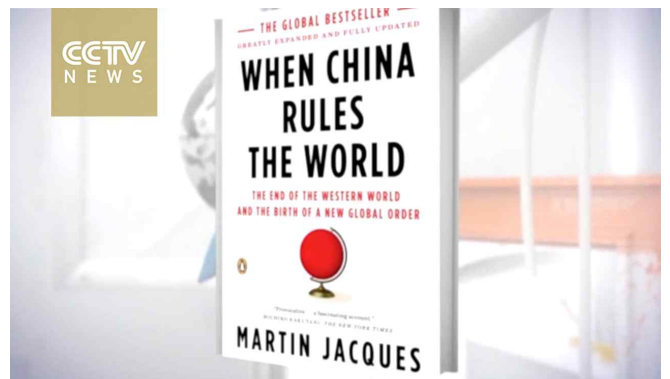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교수

최근 러시아 정치·사상계의 화두는 단연 국가-문명 (State-Civilization)론이다.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러시아를 단순한 민족국가나 서구식 국민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역사를 지닌 다민족·다종교적 전통을 포괄하는 거대한 문명 공동체이자 정치적 실체로 규정하는 이론이다.

21세기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와 이에 맞서는 다극 체제가 충돌하는 양상을 띤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로 접어들며 이러한 흐름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BRICS)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연대를 통해 자신들을 다극화된 세계의 핵심축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을 독자적 문명권을 대표하는 ‘국가-문명’으로 규정하며 담론을 강화해 왔다.

‘국가-문명’ 개념이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영국 역사학자 마틴 자크(Martin Jacques)의 저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서구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탄생』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이 미국과 영국에서 출간되면서부터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중국이 현대화되고 있지만, 서구화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 서구의 근대성은 단일하고 고유한 것이 더는 아니며 우리는 ‘근대의 분열’을 목격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유럽에서 민족(국민)국가는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제도였지만, 동양에서는 국적이 매우 혼합되어 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뒤섞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문명’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그는 제안한다.



마틴 자크의 책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중국 뉴스에도 소개된 바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vAd\\_VXxpEuk](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vAd_VXxpEuk))

마틴 자크의 저서는 중국 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어졌는데, 2011년 중국어로 출판됐고, 2012년 영어로 출판된 장 웨이웨이(Zhang Weiwei)의 저서 『중국의 물결: 문명국가의 부상』 (The China Wave: Rise of a Civilizational State)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의 관점에서 국가란 저항해야 할 불가피한 악으로 간주되지만, 중국인의 윤리적 의식에서 국가는 미덕으로 인식된다. 문명국가는 광대한 영토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다국적 구성 요소 간의 연대 형성을 촉진하며,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역사적 정치 체제



이다. 중국은 다양한 언어, 종족, 문화, 전통을 천 년 이상 포괄하며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 문명 이념, 사회주의 이론, 그리고 경제 근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가-문명’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 러시아에서도 국가-문명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러시아 사상사에서 러시아 문명론에 대한 성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즉, 러시아 문명론 연구는 19세기 슬라브주의의 형성부터 시작하여 소비에트 시기 지역적·문명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 입장을 거쳐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민족주의 및 유라시아주의의 등장까지 계속 축적됐다. 1990년대 알렉산드르 두긴은 러시아를 단순한 민족국가 아닌 다민족·다종교를 포괄하는 ‘대륙 문명’으로 규정하고 서구의 해양 문명과 대립시키며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했다. 두긴은 “러시아는 역사의 축이다. 왜냐하면 문명이 그 주변을 회전하기 때문이다. [...] 러시아는 단순히 대륙의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니다. [...] 러시아는 유라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국가의 정당성을 문명적 특수성에 근거 지으려 했다. 이는 이후 푸틴 정권이 국가-문명론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초가 됐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문명’을 결합하여 국가의 정체성·가치·역사성을 문명 단위로 서술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문명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학자들로 V.B. 메쥬예프, V.I. 스피리도노바, R.I. 소콜로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 외에도 2020년대 현재까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문명은 ‘공통의 종교나 이념, 문화의 상보성,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통의 역사적 운명의 원칙으로 통합된 거대한 다국적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러시아 제국’과 ‘소련’을 재해석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서구 학계의 입장에서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항 담론, 네오 유라시아주의적 정치 이데올로기, 러시아 중심의 국제질서 변화를 정당화하는 전략적 서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주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맥락에 초점을 둔 평가로서 특히 이러한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러시

아의 크림 합병과 동부 우크라이나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규범을 약화하는 도구라고 비판한다.

러시아에서 ‘국가-문명’ 개념이 국가 담론의 일부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푸틴 집권기, 특히 2010년대 이후이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주로 ‘강한 국가’와 ‘주권 민주주의’를 강조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러시아의 독자적 문명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점차 전환했다.

우선 2012년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일련의 정책 담화에서 “러시아는 수 세기에 걸쳐 다민족 국가로 부상하고 발전했다. 가족, 우정, 직업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상호 적응하고, 서로 침투하며, 민족들이 섞이는 과정이 진행된 국가였다. [...] 러시아 국민의 자기 정체성은 러시아의 문화적 핵심으로 결속된 다민족 문명이다.”라고 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www.rbc.ru)

2015년에 채택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에서는 문명 담론의 제도화를 보여준다. 이 문서에서는 “문화 분야의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 러시아의 전통적인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강화하고 증진하며, 국가적·종교적·인종적 관용을 보장하고, 러시아연방 국민 간의 상호 존중을 증진하며, 민족 간 및 지역 간 문화적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 과정을 가속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을 ‘전통적 가치,



역사적 유산, 다민족·다종교 공동체'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문화적 광역 단위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배경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담론은 2020년 개정되어 추가된 「러시아연방 헌법」 67조 1항에서 러시아를 '소련의 법적 승계국'으로 명시하고, '천년의 역사적 통합성'을 지닌 국가로 지칭하면서 헌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나아가 2023년에 채택한 「러시아연방 외교정책 개념」에서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천년이 넘는 독자적인 국가 건설 경험, 이전 시대의 문화유산, 전통적인 유럽 문화 및 기타 유라시아 문화와의 깊은 역사적 연관성, 그리고 수 세기 동안 공동의 영토 내에서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및 언어 집단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장해 온 능력은 러시아의 특별한 지위를 규정한다. 러시아는 고유한 국가-문명으로서, 러시아 민족과 러시아 세계(루스키 미르)라는 문화-문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민족들을 통합시킨 광대한 유라시아 및 유럽-태평양 강대국이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다극 체제의 주요한 문명적 중심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문명 담론이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국가전략 문서에 제도화되어 러시아의 대외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패러다임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요컨대, 푸틴 시대의 국가-문명론은 국가 정체성의 사상적 근거로서, 국제 체제에서 서구 중심주의에 맞서는 대항 담론으로서, 그리고 국가전략 문서에 제도화된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 국가-문명 담론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표방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 수립과 외교 전략을 지탱하는 실질적 기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교육·문화·종교·청소년 등 다양한 국내 사회정책 전반에서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제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교육부는 2023년 「러시아 역사 교육 개념」을 채택하여, 전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역사 교육을 필수 주제로 규정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역사 인식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시민적,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적 과거에 대한 공동의 이해는 러시아 다민족 국민의 단결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역사 교육이라는

개념은 고등 교육에서 역사 교육의 공동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적 책임, 애국심, 그리고 범 러시아적 통합이라는 이념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의도됐다."라고 언급한다. 즉, 이 정책은 '러시아 역사의 통일적 해석'을 통해 '국민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애국심 함양'을 유도하며 '범 러시아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러시아 문화정책에서 국가-문명론은 전통적 가치 보존을 핵심 원리로 한다. 2014년에 제정했고 2023년 개정된 「국가 문화정책의 기초」에는 러시아 국가-문명론 관련 내용이 대폭 삽입됐다. 이 개정된 문화정책에서 러시아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기초로 형성되어 왔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러시아는 위대한 문화, 방대한 문화유산,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전통, 그리고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며, "러시아의 역사적 여정은 다국적·다종교적 러시아 사회에서 러시아의 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사고방식의 특징, 그리고 삶의 가치 기반을 규정해 왔다." 나아가 "러시아의 문화는 천연 자원만큼이나 러시아의 유산이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사회 경제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러시아 문화를, 자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물질 자산으로까지 비유한다.



러시아는 2014년에 「국가 문화정책의 기초」를 제정했다. (출처: www.rg.ru)

러시아 종교 정책은 특히 러시아 국가-문명론에서 강조하는 전통적인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강화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2014년에 제정했고, 2022년에 개정된 「러시아 전통 정신적·도덕적 가치의 보존 및 강화를 위한 국가 정



책의 기초」에 따르면, “전통적 가치는 러시아 국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도덕적 지침으로, 대대로 이어져 모든 러시아 시민 정체성과 국가의 통합된 문화 공간을 뒷받침하고 시민적 단결을 강화하며, 다국적 러시아 국민의 정신적, 역사적, 문화적 발전에서 독특하고 뚜렷하게 표현됐다.” 그런데 전통적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러시아의 역사적, 정신적 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인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및 기타 종교였으며 [...] 정교회는 전통적 가치의 발전과 강화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2022년에는 국가두마(하원)가 「러시아 아동·청소년 운동법」을 채택하고, 연방의회(상원)가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2024년에도 개정됐다. 이 연방 법률은 교육 기관, 협회, 운동, 공동체와 클럽에서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한 통일된 정책을 개발하고, 아동·청소년 지원을 통합·강화하며,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러시아 아동·청소년 운동 설립을 규정한다. 이 운동의 목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정신적, 도덕적 가치, 러시아연방 민족의 전통, 그리고 러시아 및 세계 문화의 업적에 기반한 세계관 형성을 포함”한다. 또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근면, 법적 의식, 환경 보호,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자신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등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법은 러시아 국가-문명 담론을 조기 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축한 것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틀을 마련했다.



2022년 러시아 국가두마가 채택한 「러시아 아동·청소년 운동법」을 연방의회에서 승인했다. (출처: www.er.ru)

이처럼 2020년대 이후 다양한 교육정책 및 문화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시민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조국에 대한 충성과 국가 의무에 대한 각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도덕적 기준, 시민 정체성, 문화적·역사적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명론적 담론이 단순히 문화 보존만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충성, 국가의 통합, 애국심 강화 등의 사회정책 목표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소수민족, 지역 문화, 교회 및 종교 공동체, 언어 공동체 등을 문명국가 중심 틀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제도화 메커니즘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정책 확립과 방향성 제시로서 대통령령·국가전략·외교 개념 등 고위 문건을 통해 문명론적 언어와 원칙을 정책 체계에 삽입한다. 둘째, 교육·문화콘텐츠를 동원하는 과정으로서 교육 콘셉트·교과서·문화 사업 지원을 통해 국민의 역사적 기억과 가치관을 표준화한다. 셋째, 사회와의 결합으로서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정체성 재생산과 청소년 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를 활용한 사회화 전략을 전개한다.

이처럼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사회정책 속에서 교육, 문화, 종교, 청소년 등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공통된 목표는 ‘서구와 구별되는 러시아적 정체성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정치, 외교 전략의 실질적 기제일 뿐 아니라, 교육, 문화, 청소년, 종교 등 국내 사회정책 속에 구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를 ‘문명국가 러시아’라는 틀 속에 동원하는 체계적 이데올로기 장치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국가-문명론은 사회적으로 국민의 내부적 결속 강화, 정권의 권위주의적 정당성 확보, 통일적인 역사관과 국민 정체성의 강화 효과를 가져오지만, 반대급부로는 시민사회의 다원성 축소, 자율성과 인권 박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약 등 부정적 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지배 질서에 맞서 세계의 다양성을 주창하는 러시아 국가-문명론의 존재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야기되는 내부적인 다원성과 다양성의 제약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내부적인 단극 지배 질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국가-문명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포함해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지배와 종속 체계에 관한 전면적인 연구와 재해석이 향후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러시아 ‘문명론’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  
바 있지만, ‘국가’와 연계한 ‘문명’ 담론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러시아 학계는 러시아  
국가-문명론을 단순한 정치·외교적 수사가 아닌 대외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독트린으로 이해함은 물론 대내적으로  
도 실제 사회정책 속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  
즘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여러 측면의 연구를 한층 더 활발하  
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